



タイトル Title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학생·청년 지원 정책
著者 Author(s)	임, 은희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高等教育における経済的負担軽減及び修学支援に係る法・制度・行財政の日韓比較研究, 「韓国高等教育研究所」関連論考:
刊行日 Issue date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Research Paper / 研究報告書
版区分 Resource Version	author
権利 Rights	
DOI	
JaLDOI	
URL	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81012446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학생·청년 지원 정책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College Students and Youths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¹⁾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대학생·청년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서울시립대)에 한국 최초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되자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대학생·청년 지원 정책 중에서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1.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설립한 공립 대학이다. 2020년 서울시립대에는 총장 1명, 전임교원 430명, 직원 248명, 조교 69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학생 수는 학부 9,028명, 대학원 2,734명이다.²⁾ 서울시립대 재정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473억 원이다. 서울시 지원금이 약 1,041억 원(사업비 지원 536억 원, 인건비 지원 505억 원)으로 70% 가량을 차지하고, 대학 자체 수입금이 약 432억 원이다.³⁾

서울시립대는 2012년 한국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도입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당선 직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했고,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2012년부터 실시했다.

박원순 시장이 반값등록금을 도입한 배경에는 2011년 한국 사회에 ‘반값등록금’이 주요 이슈였던 영향이 크다. 박원순 시장 당선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먼저 반값등록금 도입 의지를 표명하고, 2011년 7월 8일 정례회에서 김희전 의원 외 60명이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⁴⁾

이어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

현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범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시민단체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교육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당선 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182억 원이 포함 된 추진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16일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립대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기성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2년 등록금을 2011학년도 대비 50% 인하한 금액을 확정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은 서울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규정 사항이 없다. 서울 시장의 정책 의지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서울시립대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학부)은 2011년 478만 원에서 2012년 239만 원으로 절반이 감액됐다. 이후 등록금은 동결 돼 2020년에도 239만 원이다.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인 서울대(601만 원), 서울과학기술대(544만 원), 서울교육대(309만 원)와 비교하더라도 저렴하다.⁵⁾ 등록금이 저렴해 서울시립대 학생 중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상당수는 ‘무상등록금’ 또는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다. 2019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시립대 학부 학생은 3천 명이 넘는데, 이 중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1유형과 다자녀)으로 지원받은 학생이 2천 4백여 명이었다.⁶⁾

반값등록금 영향으로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이 줄고, 학업과 자기개발에 투자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⁸⁾해 ‘市立’ 대학으로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한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학자금대출 인원이 2011년 1,489명(31억 원)에서 2016년 282명(2.9억 원)으로 감소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한 학생 수도 2011년 1,414명에서 2016년 4,242명으로 증가했다.⁹⁾

반면, 반값등록금 때문에 서울시립대 교육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2016년 10월, 서울시립대 무상등록금 정책 추진 의견을 밝혔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는 ‘서울시립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였다. 서울시가 학생 등록금 지원을 늘리면, 교육·시설비 지원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¹⁰⁾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는 “2017.10월 현재 서울시립대 예산은 1,036억 원으로 반값등록금 시행 이전인 2011년 803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강과 수 감

1) 임은희, 林銀熙, IM EUN HUI / 고등교육정책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공공성 관점에서 본 고등교육 현황과 개선방안>(2016년),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2020년) 등

2)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대학현황)

3) 사업비는 2019년 3월 1일~2020년 2월 28일 지원액이며, 인건비는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지원액이다.(※ 자료 : 서울시립대, 2019년 대학회계 예산편성 현황 및 2019년 인건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청구 자료, 2020.)

4) 2011년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9명이었다.

5) 대학교육연구소, 2020년 대학 등록금 현황, 2020.6.28.(<http://khei.re.kr/board/recent>)

6) 대학교육연구소 DB

7) 연합뉴스 기획취재팀, “<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험> ①등록률↑·학자금↓”, 『연합뉴스』, 2012.9.10

8) 정유미, “반값등록금으로 받은 혜택, 시민에게 다시 돌려야죠”, 2014.8.18.

9)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2012년) 이후, 17년 세입규모 46% 감소 관련 국감해명자료, 2017.10.25.

10) 온라인 뉴스부, 박원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내년 시행은 않겠다”, 『서울신문』, 2016.10.21.

소, 100인 이상 강좌 수 증가, 시간강사 감소는 사실이나, 이는 교육부 구조개혁평가의 핵심지표인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¹¹⁾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전문대 등록금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남도립대(전라남도 설립·운영)는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했고¹²⁾, 충북도립대(충청북도 설립·운영)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30% 인하했으며¹³⁾, 강원도립대(강원도 설립·운영)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20% 인하¹⁴⁾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은 서울시립대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다시 지역 사회에서 서울시립대에 지원을 확대하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먼저 시작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반값등록금 도입에 앞서 2011년 11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시립대 학생 사회공헌 선언식’을 했다. 재학생 스스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습 멘토가 되고,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다.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¹⁵⁾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구성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4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교 구성원의 자발성 원칙(제3조) △대학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제4조) △시장의 사회공헌활동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제5조)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등에 대한 시장의 지원(제6조) 등이다.

2.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및 장학금 지원

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 졸업생을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11)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2012년) 이후, 17년 세입규모 46% 감소 관련 국감해명자료, 2017.10.25.

12) 안관옥, 전남도립대 ‘반값 등록금의 힘’, 『한겨레』, 2013.3.5.

13) 박병기, 충북도립대 등록금 30% 인하, 『연합뉴스』, 2012.1.17.

14) 최승현, 강원도립대 등록금 20% 인하키로, 『경향신문』, 2012.1.24.

1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추진”, 2012, 5쪽.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이다.¹⁶⁾

대학원생은 제외다. 2019년 2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자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크게 ‘일반 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 두 종류다. ‘일반 상환학자금’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직후부터 상환 전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이 시작되면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한다. 대학원생 모두와 학부 재학생 중 고소득 가구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상환을 시작한다. 학부 학생 중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이용한다.

서울시는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이자의 경우, ‘기초 생활수급권자~소득 7구간(분위)’ 학생은 전액 지원하고, ‘소득 8구간’은 별도로 지원액을 결정한다. ‘소득 9~10구간’ 학생은 지원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이자의 경우, ‘기초 생활수급권자~소득 8구간’ 학생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하고, ‘소득 9~10구간’은 지원에서 제외다. 다만, 지원자 수 대비 예산 여유가 있을 때에는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자녀 가구 대학생은 학자금대출 종류, 소득수준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한다.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매 학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인 위원장을 맡고, 시의회 의원 3명,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대학 학자금대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대학생·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장학금 지원

서울시는 대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타 지역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초 생활수급자~소득 4구간(분위)이어야 한다. 2020년 장학금 예산은 40억 원이고, 1년에 2,400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¹⁷⁾

16) 서울시, [대출이자지원] 2020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공고(7.6~9.7), 2020.7.6.

17)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대학생 장학금 안내)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은 전공 분야에 재능과 학업 의지를 가진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은 총 5억 원이고, 125명에게 최대 400만 원을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 의지가 강하고 △전공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지역 사회와 공공 영역에서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2020년 사업 총 예산은 2억 4천만 원이고, 대학생 60명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공익영역 활동 경험이 있는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이다. 소득분위 기준은 없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학생 장학금 제도는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 장학금(2020년 예산 2억 8,200만원, 60명에게 연간 350~500만원 지원),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예산 2,000만원, 10명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예산 3억원, 100명에게 연간 300만 원 지원) 등이 있다.

3. 청년수당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선정 자격을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 청년(2020년 사업 기준)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1인당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지원 후에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추가로 3개월 더 지원받는다.

2019년 1차 사업에서 약 4천 명, 2차 사업에서 1,500명을 지원했고, 2020년 1차 사업에서 2만 3천 명, 2차 사업에서 1만 명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평가를 거쳐 선발 인원을 결정했는데, 2020년부터는 예산을 크게 확대해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범위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하다. 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등 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¹⁸⁾

18) 서울시, 2020년 서울청년수당(2차) 사업 FAQ, 2020.6.19.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확대해 ‘기본수당’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만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기본소득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청년소득 확대는 큰 틀에서 기본소득의 하나”라고 설명했다.¹⁹⁾

참고로 한국에서는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1년 동안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도 지난 5월에 1회성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²⁰⁾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목적으로 전체 지역민 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4. 대학생·청년 주택지원 등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이 중요하다. 대학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7.5%(2019년)로 부족하다.²¹⁾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학 밖에서 주택을 구해 생활하는데, 서울 주택비용은 매우 비싸다.

서울시는 대학생과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통학과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마련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 비용은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책정하며,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²²⁾

‘청년임차보증금’ 정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며,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인,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차보증금 지원액은 7,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 중 작은 금액이고, 금리는 연 2.0%다. 대출 지원 기간은 최대 8년이다.

19) 채운태, “꿈 실현·진로 찾기에 숨통 트여” 서울 청년수당 10만명까지, 『한겨레』, 2019.10.23.

20) <http://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21) 서울지역 4년제 대학 기준(※ 자료 : 대학알리미)

22) 서울특별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이 외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시리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시 곳곳에 마련한 ‘청년 활력 공간 지원’ 사업 등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중에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제외한 대학생·청년 지원 정책은 서울시가 2015년 11월 발표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서울시는 청년 관련 4개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20가지 정책을 2020년까지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²³⁾

한국은 전체 대학생의 22%가 서울에 모여 있고,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인구의 22%가 서울에 모여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높고,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며, 취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과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해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23) 서울시, 서울시 청년정책,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내 손안에 서울』, 2015.12.10